속도·신호위반하면 車보험료 더 낸다

9월부터 … 가해자 알 수 없는 사고도 인상

손보사 경영손실 운전자에 전가 논란일 듯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도 차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는 보험사 경영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운전자들에게 보험사 손실을 떠넘기려 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으려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현재 가해자 불명 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차량을 수리할 때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불법 정비업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불법 정비업체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건강보험 의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하향조정 등을 관련 부처와 경찰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으로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 김모(43)씨는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는 없이 사소한 교통위반을 빌미로 교묘하게 보험료 만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가지 맛의 '대저토마토' 광주신세계백화점은 23일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일반 토마토에 비해 당도가 높은 대저토마토를 선보였다. 대저토마토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만 생산되는 토마토로 짠맛, 신맛, 단맛이 어우러져 '짭짤이 토마토'로도 불린다. 가격은 100g 1천280원.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1월 중 광주·전남금융기관

예금 늘고 대출 줄어

올 1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늘고 여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1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수신은 2천373억원이 늘어났지만 전달(8천34억원)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됐다.

예금은행(2천186억원→2천782억원) 수신은 은행들의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 호조 등으로 정기예금이 2천782억원이 늘어나면서 전달(2천186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

또 금융기관 전체 여신은 1천38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2천965억원→757억원)의 여신은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자금수요 및 전년 말 일시 상환분 재대출 등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현금서비스 수수료 사라진다

신한·현대·한국씨티 등 카드사 내달 폐지·인하키로

서비스 금리 평균 1.6%P↓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회원에게 선이자 개념으로 받는 취급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비씨·SC제일·기업·신한 등 5개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최근 폐지했거나 다음 달부터 없앨 예정이다.

취급수수료는 카드사들이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환산 4% 수준인 취급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포함해 평균 26% 수준이다.

하나카드와 비씨카드는 취급수수료를 전액 폐지했고,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취급수수료를 없애면서 금리인하분을 일부 만회하기 위해 이자율을 다소 올렸다.

나머지 15개 카드사들은 취급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당국의 현금서비스 금리인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정도 낮췄다.

이들은 또한 각종 수수료를 모두 대출금리로 보는 개정 대부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3~9일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중도 상환하면 취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금서비스를 단기간에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수수료를 물리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환산 49%)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대인 조달금리에 비해 현금서비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일제히 금리를 낮췄지만, 업계 평균 인하폭은 1.6%포인트 수준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인하 현황

회사	시기	내 용
삼성	1월	0.55%에서 0.43%로 인하 (9일 이내 면제)
하나	1월	0.4% 전액 폐지
비씨	1월	0.4% 전액 폐지
제일	1월	0.4% 폐지 후 이자율 (연 환산 1.2%) 인상
우리	1월	0.2~0.5%에서 0.25%로 인하 (4일 이내 면제)
롯데	2월	0.55%에서 0.44%로 인하 (9일 이내 면제)
기업	1, 2월	0.4% 금리에 포함한 뒤 이자율 (연 환산 1.3%) 인하
외환	2월	0.55%에서 0.35%로 인하
수협	2월	0.4%에서 0.35%로 인하 (3일 이내 면제)
농협	3월	0.4%에서 0.18%로 인하 선결제 취급수수료(500원) 폐지
광주	3월	0.4%에서 0.2%로 인하 (5일 이내 면제)
신한	4월	0.6% 금리에 포함한 뒤 이자율 (연 환산 1.37%)인하
현대	4월	0.59%에서 0.3%로 인하 (8일 이내 면제)
국민	3월	0.5%에서 0.3%로 인하 (8일 이내 면제)
씨티	4월	0.5%에서 0.3%로 인하

※대출금액 대비 취급수수료율 0.5%는 연 환산 4.56%에 해당

성실하게 세금 낸 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 제외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이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해서 사업한 연간 수입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과 연간 수입액 20억원 미만의 개인으로서, 성실 신고 사업자 약 9만5천700명이다. 이중 법인 사업자는 1만600명, 개인 사업자는 8만5천100명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7만5천900명으로 이중 법인이 6천100명, 개인이 6만9천800명이며 수도권은 1만9천800명으로 법인이 4천500명, 개인이 1만5천300명이다.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세 모범납세자'도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사업자는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부담감을 떨쳐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4년만에 10배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4년 만에 1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4억4천192만건, 발급금액은 68조7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4억4천894만건에서 2006년 7억3천774만건, 2007년 14억8천927만건, 2008년 28억8천992만건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발급금액은 2005년 18조5천598억원에서 2006년 30조6천266억원, 2007년 50조2천562억원, 2008년 61조5천559억원, 2009년 68조7천564억원으로 4년 만에 3.7배로 증가했다. /연합뉴스